

# 조국 겨냥해 공세 강화하는 野 vs 방어막 치는 與

## 한국당·바른미래당 “文대통령, 조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 민주당 “가족 청문회”로 변질...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사모펀드 투자 의혹, 조 후보자 일가의 채무 논란, 위장전입·매매 의혹, 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 등의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야당은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여당은 방어막을 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할 것 같다”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문 대통령이 알고도 후보로 지명했다면 대국민 조롱·농락”이라

며 “조 후보자는 이 정도면 비리의 중합성불세트, (비리의) 무한리플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주광덕 의원은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본인이 진실을 설명하면 된다”며 “청문회를 열면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도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하던 용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 “이런 분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검찰로 가서 수사부터 받고 신변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

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정권 최고 핵심 실세에 대한 코드 인사”라며 “국론 통합에 가장 크게 역행하는 이런 코드 인사를 대통령이 해야 했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한 논란으로 디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검증 대상이 아닌 선천이나 이혼한 가정사를 들춰 의혹을 만들고 사퇴 요구까지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무차별적 인신공격, 신상털기의 장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스스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관련성이 없다고 누차 밝혔다”며 “최근 우리 국민들이 후보자가 아닌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는 것이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해명을 철저히 촉구하고 이런 것에 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靑, 커지는 조국 논란에 “청문회서 해명 듣자”

### 위장매매·사모펀드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그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자’며 관련 언급을 아끼고 있다. 위장매매, 위장이혼, 사모펀드 등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공격은 예상했던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들 상당 부분은 청문회 당일 이야기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현재 청와대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투명하게 판단해줘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만큼 조 후보자에 대해 더욱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야당에서 조 후보자 검증에 사활을 걸고 있기도 해 자칫 괜한 언급으로 조 후보자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으려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그래도 여러 의혹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과 그에 따른 국민의 목소리는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아직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법에 인사청문회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제6조),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제9조)하도록 규정된 점을 언급. “정치일정이 법적일정에 우선할 순 없다. 국회는 기일 내에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신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조 후보자 또한 같은 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로 출근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시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 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고 했다.

이는 청문회 해명에 따른 여론 반전을 기대하는 것으로 읽힌다.

한편 청와대가 야당 등에서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이미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확실시한 기류도 감지된다. 강 수석은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 들어서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이 15명(실제 16명)에 이른다.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권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사법개혁 책임자”라고 말했다.

## 석달만에 다시 광화문 가는 황교안... ‘실효성’ 논란 직면

### 5월 이후 다시 장외집회 예고...당 내부 반발 목소리도

### “태극기 부대 같은 방식 반복하면 외연확장 어려워”



자유한국당이 석달여만에 다시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미사일 도발 등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폭정 저지’라는 주제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4월 시작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황 대표로서는 당이 친일 프레임 등에 몰려 진당대회 이전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위기상황에 처하자 불가피하게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 한국당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안보’ 이슈까지 터지자 수세에 몰렸던 국면에서 벗어나 정부·여당에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장외집회에 대해 당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공

개적으로 반발하지는 않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대통령’ 등 좀 더 큰 야망을 꺼내놓아야 할 대표가 너무 디테일한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들리고 있다.

원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일에 대표까지 나서기보다는 불필요한 보수통합과 같은 총선 전략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장외집회에는 대규모의 당원이 결집하면서 지지율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번에도 앞선 투쟁과 같은 효과를 장담할 수 있느냐는 건 숙안기 어렵다. 또 장외투쟁에 참여하는 인원 역시 대다수가 당원들이라는 점에서 외연 확장보다는 ‘집토끼’ 잡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주말 간 대규모 당원 차출 역시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 의원은 19일 뉴스1과 통화에서 “도대체 왜 밖으로 나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우리당을 걱정하는 분들의 주문은 ‘스마트’하게 투쟁을 해달라는 것인데 태극기 부대와 같은 방식의 대응을 반복하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의 기회를 스스로 무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1

## 박지원 “조중통, 기분 상하게

## 제계도 비난...웃어넘긴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19일 자신을 향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원색적인 비난과 관련해 “굉장히 기분 상하게 저한테도 비난을 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북한 중앙통신에서 제계도 많이 비난하는 글을 보도했더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조선중앙통신의 비난을) 웃어넘긴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햇바닥을 함부로 놀려대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박 의원의 지난 17일 SNS 게시글을 겨냥해 “남조선의 일간이 정치인들의 망령된 추태”라고 비난했다.

또 “나살나잇살에 어울리지 않게 쫄렁거리리는 박지원이라는 국회의원의 눈꼴사나운 추태를 가만 앉아 보자니 괴롭기 그지없다”라며 “마치 자기가 6.15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주제넘게 자칭하며 햇바닥을 놀려 구린내를 풍겼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SNS에서 “(北) 정주

영 회장님 고향인 통천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2회 발사한 것은 최소한의 금도를 벗어난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북한이) 계속 우리를 겨냥해 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막말과 조롱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정상국가로의 진입이 아닌 야만국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본인의 해명을 철저히 촉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가족 용동학원 관련 의혹 해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의혹에 대해서 하나 하나 응대를 했다가는 자꾸 (의혹을) 증폭만 시키기 때문”이라며 “청문회 당일 조 후보자 본인의 입을 통해서 확실한 해명을 하겠다는 작전을 쓰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관측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뉴스1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